

시론



김영식

남부대학교 교수·웃음명상전문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전혀 상반없다고 생각하는 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두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판사가 갑자기 소리 내서 웃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은 법조인들 인지와 갑자기 웃는 웃음에 옆에 있던 판사가 뭐가 그리 우스운가? 하고 물었더니, “응방군 전에 법정 안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거든 그 농담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데” 그러자 그 농담을 자신에게도 들려달라고 했는데, “안되네! 죄인이 농담한 죄로 내가 10년 형을 선고했다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공간 중 한 곳이 아마도 법정일 것이

다. 심지어 법정 모독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먼 옛날부터 지배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여 세상을 통치해 왔으며, 웃음을 죄악시했던 시대도 있었다.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또는 주변에 생기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뇌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일 것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배경 중의 하나가 바로 다른 동물들보다 뇌를 사용하여 생각하고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유머가 억압된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했다. 개인 혹은 사회가 억압하고 금지한 생각을 자아가 슬쩍 허용할 때, 농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관대한 자아는 부드럽고 풍부한 유머를, 엄격한 자아는 어쩔지 날카롭고 따끔한 위트를 만든다. 개인이나 사회가 억압받는 상황에서의 무의식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다. 당연한 일이다. 괜히 억압되었는가? 그래서 너무 가혹한 상황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유머로 마음읽기

자아는 농담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을 보면 좀처럼 농담이나 유머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 TV에도 유머, 개그 간판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뉴스에서는 오로지 동물의 왕국처럼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하는 상황들이 너무 자주 비치는 현상은 지금의 사회가 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성의 말살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처럼 힘든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계층의 집단을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유머와 웃음이다.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 소방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직업군들이 유머 코드를 만들어 내어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유머는 더 힘을 발휘했었다. 우리 마음은 생각 에너지를 발산시켜 자신을 보호한다. 차가운 유머를 할 것인지, 따뜻한 유머를 할 것인지를 자신의 뇌로 잘 판단하여 건네다 보면 그 순간 자신의 주변을 웃음이 머무는 창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바야흐로 우리가 하는 유머나 농담도 모두

녹음되고 영상에 찍히고 SNS에 공유되는 시대가 되었다.

유머를 어떤 코드로 읽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할 것이고, 한 세상을 구하는 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코드를 읽는 주체는 내가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하루에도 수백 번 CCTV에 노출되는 우리의 삶은 이제 웃고 있어도 웃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삶에서 희극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비극밖에 남지 않는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셰익스피어의 독백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대사이다. 단순한 삶과 죽음의 경계 선택을 떠나 ‘계속해서 살만한 인간 존재의 가치’를 성찰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고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세상이 진정한 유토피아(Utopia)가 아닐까? 인공지능(AI)이 유머를 분별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쇼생크의 탈출이라든가 해야 할 판이다. 여보세요! 어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줘요.

社說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도 못하는 광주시의회

제8대 광주시의회 의정 활동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올해로 출범 4년째, 물론 우등생도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조차 못하는 것 같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낮 부끄런 실태는 본보가 자체 분석한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

등록된 시의원 수는 모두 24명이며 한 명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6.88건이었다.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은 각각 2.38건과 4.25건이었다. 조례 발의는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했는데, 평균에도 미달한 의원이 전체의 50%인 12명에 달했다. 5건 미만도 2명이나 나왔다. 시정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는 4명(16.67%)으로 확인됐다. 5분 발언 건수가 2건 이하인 시의원은 8명(33.33%)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늬만 시의원이 한 둘이 아니다. 반대로 모범이 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조례 발의는 박미정(36건), 임미란(28건), 장재성(27건), 김용집·최영환(24건) 순으로 많았다. 5분 발언에선 김학실(10회), 시정 질문은 김광란(6

회) 의원이 각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하는 의회’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지방의회가 개원 30년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지적되고 또 비난받아온 이유다. 시의회는 올해 30년사에 ‘조례 20선’을 선정하기도 했으나 뒷집만 진 의원들은 흡사 남의 일로 여겼을 수 있다. 그동안 끊이지 않은 도덕성 시비에 자질 부족, 급기야 무용론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것은 사실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못해서 사단을 부른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8대 광주시의회가 종착역을 향하는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쏟아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 임기 3년여를 돌아봐야 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민의 대변자,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고해성사라도 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제라도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향우의 고향사랑 정신과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될 듯 싶다.

이른바 고향세법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제21대 국회 들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이번엔 결실을 맺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모집, 접수하며 담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세수 차이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은 그 위험이 전국에서 가

장 큰 편으로 고향세법이 절실한 숙원이었다. 당장에 전남도는 고향 발전에 도움을 주는 향우들에 발급중인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일선 시·군도 살림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환영의 목소리다.

늦기 전에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돼 불균형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 지난해 7조원 규모로 13년 만에 82배 증가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고향세법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부풀리게 한다. 또한 법률안의 통과까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치열한 열정이 있었다.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기고



이병노

담양농비전연구소 소장

10월2일은 지난 1997년 제정 이후 올해 25번째를 맞는 ‘노인의 날’이다.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을 높이고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한 ‘노인의 날’은 법정기념일이기도 하지만 국민 30%가 65세 이상인 담양군의 경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날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에게 주는 ‘노인의 날’ 메시지는 매우 크다. 필자가 사는 마을에 최씨 성을 쓰시는 올해 89세 되신 할머니님이 계신다. 집에 혼자 계시지만 정신도 맑으시고 무뎠던 썩어지시다면 뛰어다니기도 하실 것 같다. 그런데 이 할머니님은 대전에서 사는 딸집에 잠깐 계시다 이내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딸내집서 편히 계시지 왜 내려오셨어요?”라는 질문에 할머니는 “딸이랑 사위가 겁나 잘하지만 내집이 좋제. 옆집 순덕이네랑 김선택이랑 딸도 하고…”라고 대답하신다.

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용면 두 장리에 터전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알고 지내시던 어르신들이 보이시지 않아 소식을 물으면 외지 사는 자식들이 요양원에 모셨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된다. 실은 간간히 듣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소식이다. 그럴 때마다 ‘평생 사시던 고향을 떠나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하는 생각이 늘 안타깝고, 수년째 소식 없던 분들이 부고와 함께 텅그러니 영정만 돌아오는 걸 볼 때면 찢어지는 가슴을 가눌 길이 없다.

한때가 논밭이지만 조상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지킨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은 1920년생부터 1940년대 생들이 많다. 전쟁과 산업화 등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다. 이제 그분들이 하나둘 떠나는데 고향이 아닌 자식을 사는 타향에서 외롭게 계시다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꼭 힘 모아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필자는 담양군 주민복지실장을 지내며 여러 가정사를 알게 됐고 많은 사례를 살펴봤다. 전쟁 어르신들을 위한 일은 나라에서도 못하고 대형병원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사병검을 가지게 됐다. 자식을 입양에선 남들 눈 부끄럽다고 부모님을 대처로 모셔 가지던 어디 고향만한 곳이 있었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평생 지켜온 마을을 떠나지 않고 또 친구분들과도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쏟았다.

자식들에게 집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 마음을 달래드리고 동시에 어르신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효도행정’을 연구하고 마련하

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40년 공직생활과 노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느낀 점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이를 두고 ‘향촌복지’라 이름을 붙였다. 구순을 넘기신 제 양친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시대와 우리가 사는 담양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깊이 성찰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산이 보이는 곳에서 마을사람들이 문병 오기도 편하고 같이 입원해 평상시 같이 생활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향촌복지’를 실현해 ‘담양사람 담양에서’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만들겠다. 자식들도 마음 편히 지내고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지면상 세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기존시설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적어도 담양군에서 만큼은 ‘외로운 여성’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다가오는 가을철 주택화재 예방하자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날씨와 건조한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실감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의 경우 기온이 낮아지면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못 사용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작년 가을철(9~11월) 전라남도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56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115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을철 화재발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많고,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순이다.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화재 예방 수칙을 기억하고 준수하자.

첫째,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가스 밸브와 전선 피복 및 콘센트가 노후 되면 않았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위험하며, 콘센트 주위에 먼지가 많으면 스파크 등의 불꽃이 튀어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주기적인 먼지 제거도 필요하다. 외출시에 가스 밸브는 잠그고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아 전기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음식을 조리 시 주의해야 한다. 조리 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멀리하고,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하고,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식용유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주택화재,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

〈정용선·광양소방서 중대119안전센터장〉

사이버성범죄는 중대범죄 적극 신고를

버닝썬 사태와 관련된 정준영 사건처럼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 실제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성착취물 사건,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n번방 사건, 가상 아닌 현실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성착취는 완전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통·유포·협박·지장·전시 등 사이버범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성 착취물과 전정을 벌이는 계기로 삼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낯선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유없이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고,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고,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고, 조건만남. 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랜팅채팅방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 할 때, 만남 거절 대화 중단하고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해야 한다.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몸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대화중단 신고하고,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해 언제든지 경찰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고 피해를 입은 것은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 112·117 등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등에 연락을 해야 한다.

여성의 몸은 상품화 대상이 아닌 소중한 인격체로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 돼야 하고 주변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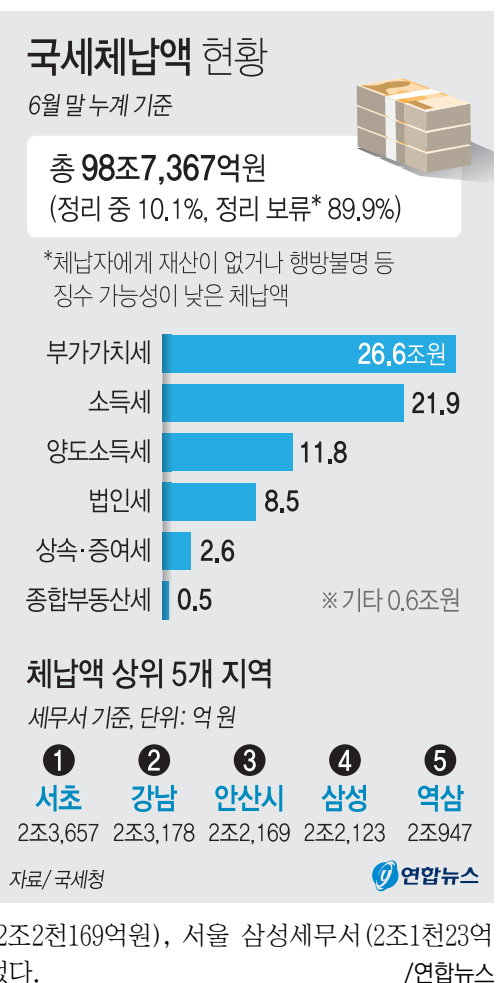
못 받아낸 국세 100조...서울 서초·강남 최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정불명예 받기 어려운 상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국세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웠고, 서울 서초와 강남 세무서에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누계체납액은 98조7천367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천124억원(36.6%) ▲소득세 21조8천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천470억원(16.3%) ▲법인세 8조4천959억원(11.7%) 순이었다. 상속·증여세 2조6천425억원(2.7%)과 종합부동산세 5천311억원(0.5%)도 체납돼 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누계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4.2%(43조6천713억원)이었다.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이 12.2%(12조118억원),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이 16.2%(16조3천),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이 10.5%(10조3천538억원)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3천657억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천178억원으로 2위였다. 이어 경기 안산세무서(2조2천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천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가 뒤를 이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8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정 치 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경 제 부 650-2050 논 사 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 고 문 의 650-2099 광 고 국 650-2072 경 영 지 원 국 650-2010 기 획 사업 국 650-2079 업 무 국 650-2020 FAX 편집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